

## 북핵의 진실 게임과 死即生の 先軍정치

이정철(삼성경제연구소)

- 백보흠·송상원, 『영생』(평양: 문화예술종합출판사, 1997)
- 정기종, 『력사의 대하』(평양: 문화예술종합출판사, 1997)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 1. 2002년 10월, 강석주 발언의 진실과 오해

소설 『력사의 대하』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금 적들은 우리가 원자무기를 가지게 될가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백보흠 외, 90쪽).

거두절미하고, 소위 ‘적’이 이같은 발언을 면전에서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공갈이라고 웃어넘기기보다는, 자신들을 기만하고 은밀하게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 온 것으로 간주하고 적대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까?

북한 핵 문제가 재부상한 것은 2002년 10월 평양 회담에서이다. 당시 미국 측은 회담을 끝내고 열흘여 후인 10월 17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HEU)에 의한 핵 개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 측이 밝힌 북측의 문제 발언은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sup>1)</sup> 미국 관료들은 이 발언이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 보유를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한발 더 나아가 북측이 농축 우라늄을 시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이라느니, 심지어 일부에서는 생화학 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sup>2)</sup> 당시는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시인한 직후여서, 북한의 대미 핵 시인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곧 이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은 핵 개발을 시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협상보다 자신들에 대한 압박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 측에 대해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이 격앙된 분위기하에서 “핵무기 보다 더한 것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한 그레그 전 주한대사와 돈 오버도퍼 교수 일행이나 2004년 1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의회 및 민간 대표단으로 구성된 존 루이스 스탠포드대 명예교수 일행은 이와 관련해 ‘통역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해 북한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북측에서 보여주거나 설명해준 내용에 따르면 북측은 “핵무기를 가질 자격이 (entitled to have)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sup>3)</sup>

1) 그러나 북한이 실제 구사한 표현은 ‘갖고 있다’는 현재형의 표현이 아니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미래형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서동만의 주장이다. 현재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 능력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평가다. 우라늄 농축 핵 물질 추출을 위해서는 1,700대(1대당 20만 달러)의 원심 분리기를 1년간 풀 가동하여 1개 우라늄 탄 제조 필요량의 80%가 얻어진다는 것이다. EK라서 현 단계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보아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된다. 서동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병행전략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원, 『2003년 북한문제 시나리오와 대책』(2002), 267쪽.

2) YTN, 2002년 11월 14일. 일본 소식통 인용; 『월간 지구촌』, 1호(2003) 등.

지난 2월 북경에서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는 쟁점의 하나로 남아 있다. 6자회담에서 북측은 HEU 문제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하며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이에 대해 북측이 하나씩 해명하겠다고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금창리 방식의 협상<sup>4)</sup>을 제안한 것이다. 반면 켈리 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북한 측이 이를 은폐할 것이라며 증거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sup>5)</sup>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북한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원래 실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의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도 어둠 속에 파묻히기 쉬워서, 모든 당사자가 선의이지만 오해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대결로 귀결되기도 한다. 그 책임 소재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3) 돈 오버도퍼 교수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1월 10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켈리와 미국 대표단에게 고립된 국가인 북한은 미국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끝에 북한 측의 발언을 켈리의 추궁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 대표부는 비밀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는 켈리의 추궁을 명백히 사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이 취한 조치가 부시 행정부의 적대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만 말했다…… 그들은 또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4) 금창리 방식이란 미측이 의혹을 제기한 금창리 시설에 대해 북측이 미국의 ‘참관료’를 조건으로 사찰을 허용하여 의혹을 해명한 방식의 협상을 말한다.

5) 『연합뉴스』, 2004년 3월 3일.

“켈리 차관보는 상원의교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나라들이 종종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라늄 프로그램이 플루토늄 프로그램보다 숨기기가 쉽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면 당신을 그것을 숨기기가 쉬워진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켈리 차관보는 2002년 10월 평양회담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03년 7월 진술.

자발적으로 핵 개발을 시인했다는 주장 외에 다른 어떤 증거를 미국이 제출하지 않는 한 상황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당시 회담은 평양에서 진행되었고 미국과 북한이라는 당사자 외에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행위자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양자는 정반대의 논리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HEU 프로그램을 시인하지 않았다면,<sup>6)</sup> 북한이 핵을 시인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북한의 표현에 대한 미국 관료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한 증명 여부를 떠나서, 미국 대표단은 북한 측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현재형이던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갖게 되어 있다”는 미래형이던, 북한 측의 담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양자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글의 문두에서 인용한 소설 『력사의 대하』에 나타난 김정일의 주장에 나온 “원자무기보다 더한 것”은 어떤 실체를 지닌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북한식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조차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북한식 담론인 것이다. 실제 동일한 담론은 북한의 글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이미 이같은 표현들은

6) 실제로 당시 회담에 참여한 프리처드와 같은 전 대북교섭담당특사는 2004년 재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HEU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발언하여 여론을 남겼다. 물론 미국무부는 이에 대해 즉각 프리처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2004년 1월 16일.

7) “이 인민의 힘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백보흠 외, 90쪽).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현대적 무기나 기술수단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정기중, 47쪽).

“군사적 타격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라는 점을 미국 측이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 2. 북핵 위기에 대한 2개의 이야기

사전에 북한 소설에 대해 조그마한 지식이 필요하다. 북한 소설의 시리즈물(총서) 중에는 『불멸의 역사』 시리즈가 있고 『불멸의 향도』 시리즈가 있다.

전자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시기부터 사망 시까지의 업적을 1년 혹은 2년 단위로 소설화한 것이다. 30년대 만주 항일 투쟁 과정부터 90년대 사망 시기까지 중요한 계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 첫 권이 김일성의 첫 항일투쟁기인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과정을 담은 『땀은 올랐다』라면, 그 마지막 권은 이 글에서 다루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시기를 그린 『영생』이다.

반면 불멸의 향도는 김정일의 업적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이다. 향도 시리즈 역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본 글이 주목하는 것은 1993년 NPT 탈퇴기를 다룬 소설 『력사의 대하』이다.

불멸의 역사는 김일성 주석의 이야기이고, 불멸의 향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야기이다. 두 명의 주연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이야기는 각각 94년과 93년의 이야기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벌어진 핵 협상, 그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느낀 세상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고 북한 주민들은 무엇

---

보다 강합니다”(김철우, 146~147쪽).

을 통해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이 두 권의 소설은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지금 10년 만에 당시와 동일하게 북핵 문제가 부각되어 있다. 상황은 당시처럼이나 험악하다. 지금 북한을 이해하는 데 이보다 더 유용한 자료가 있을까하는 시각에서 두 권의 책을 권한다.

### 1) 『력사의 대하』

본 소설에는 여러 가지 줄거리가 있다. ‘향도’ 시리즈인 만큼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김정일이지만, 그를 두고 가장 큰 두개의 줄거리를 엮어가는 인물은 문선규와 오영범이다. 두 사람은 외교와 군사를 대표하는 김정일 세대의 두 인물이다. 각각은 북한의 외교전략과 군사전략의 전개 과정을 그려가는 핵심 인물이다.

본 소설의 문선규가 강석주를 지칭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외교부 제 1부부장이라는 명확한 지위가 밝혀지고 있고 영생을 비롯한 다른 소설에서도 강석주는 항상 문선규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오영범이라는 인물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문선규처럼 분명한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하는 것은 어쩌면 문선규가 강석주라는 스타를 상징한다는 것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일지 모른다. 군부의 신흥 실세가 누구인가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영범이라는 인물은 누구일까? 소설 속 군대군대에서 소개하는 오영범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77년 공병대 소대장(정기종, 80쪽), 이후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수좌(80쪽), 93년 현재 제97기계화보병여단 여단장, 소장(388쪽)에서 중장 승진 및 제 68 타격군단 군단장 승진(389쪽), 당시 39세(7쪽). 그가 실존 인물이라면 11년이 지난 현재 그의 나이는 50세가 되어 있겠다. 김정일과는 15년 터울. 후계자로 적절한 연령이다.

이같은 경력의 인물이 실제로는 과연 누구일까? 혹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급부상하여 국방위원에 임명된 백세봉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여하간 문선규가 93년 NPT 탈퇴 과정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라면, 오영범은 준전시상태 선포 과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다. 양자는 소설의 전면에서 우연한 계기로 상봉한다. 평양행 열차간에서 만난 두 사람, 서로를 알 길 없지만, 군부와 외교부 관료라는 직책만으로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다. 재밌는 것은 군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영범이 문선규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장면이다.

우리 군대는 외교적 격식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외교관들의 처사에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정기중, 10쪽).

군인들은 외교관들이 하는 처사를 아주 답답하게 여긴다구 말입니다. 그렇게 음질음질하니까 놈들이 팀 스피리트를 재개하고 핵전쟁을 몰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이야 우리가 할 일이지만……(위의 책, 12쪽).

소설은 이같은 군부와 외교 간의 갈등을 김정일이 어떻게 중심을 잡으며 끌어가는가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결론부에서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에서 군사와 외교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한다.

실상 이 소설의 재미는 1993년 3월 8일 준전시상태 선포 그리고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에 대한 내부 논의 그리고 사회적 반향 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이 3월 20일 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을 마친(정기중, 213쪽) 김정일은 피동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곧 바로 선제 조치를 취한다. 준전시상태 선포와 NPT 탈퇴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선제

타격이 미국을 굴복시킨다는 메시지는 아마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심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 2) 『영생』

한편 소설 『영생』에는 자신들의 영웅을 잃어가는 애절함이 깔려 있다. 극적 재미로 치면 『력사의 대하』에 비해 『영생』은 한결 못하다. 갈등이 고조되고 해소되는 다이내믹스가 적다.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큰 줄기는 1994년의 핵 협상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핵 협상 자체의 극적 요소보다는 주변국을 대하는 데서, 남북관계를 대하는 데서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내 정치와 경제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유훈 통치의 차원에서 그리는 것이다. 즉 김일성의 유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유훈으로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할 강령적 교시들을 내면화하는 데 이 소설의 목적이 있다.

물론 『영생』의 하이라이트는 카터 방북과 김주석과의 회동에 있다. 1994년 소위 ‘불바다’ 발언 이후 IAEA 탈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조되던 위기는 카터와의 회동으로 일단락된다. 그러나 카터와의 회동은 미국의 일방적인 굴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지나친 단순화에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생경함을 느끼곤 한다.

다만 소설 곳곳에 들어있는 미국 내의 갈등과 논란과정,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정세 인식 등은 재미보다는 현재의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시준점을 던지고 있다.



### 3. 고립무원의 사회주의 전위 의식 : 북핵과 '선군정치'의 내면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차적으로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면적 견해일 따름이다. 자고로 핵문제라는 것은 항상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왔다. 북한의 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90년대 동북아에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이 비대칭적(asymmetric dissolution of cold war)이었다는데,<sup>8)</sup> 북핵 문제의 또 다른 한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냉전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남한에 대해서 수교를 통한 안보 보장과 협력 체제를 형성하였지만, 일본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거부함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비대칭적으로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행태라는 전자의 측면에만 착안한다면 대북 포용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엄연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냉전사의 뿌리가 있다는 후자의 인식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도 있지만, 안보 문제는 쌍방 책임론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도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 체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점이다. 냉전시기 사회주의 동방 초소였던 자신들은 냉전 해체 이후에도 사회주의 최후 보루로 남아 고군분투하고 있고, 이를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미국과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인식인 것이다.

---

8) 장달중·이정철, “냉전과 탈냉전의 남북관계”, 『국제문제연구』, 24호(2003) 참조.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핵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체제 보장과 불가침조약에 두고 있는 것도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북한의 기본 인식에도 편차는 있는 듯하다. 협상의 여지는 있고 외교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잘 알고 접근하는가 하는 점이다.

### 1) 북한에도 갈등은 있다?

북한에도 강-은 갈등은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 근거는 미약하다. 북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력사의 대화』는 앞서 잠시 보았던 것과 같은 외교와 군사간의 갈등을 다룬다. 오영범이 외교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은 그들의 나약함에 있다. 외교부 관리와 오영범 간의 논쟁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경고해왔지만 그것들이 어디 귀동으로나 들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그렇게 음니암니 시간만 끌게 없이 탁 차버리고 말던가 한방 팡!... 하고 싸 갈기고 말자는 것입니다.”

... 중략 ...

“려단장 동무, 외교는 외교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탕탕 쏘는게 아니지요.”

“군대도 무턱대고 탕탕 쏘진 않습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외교에선 무엇보다 설득력과 인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방어만 해선 안됩니다. 지내 조심하다가 공격의 기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정기중, 10~11쪽)

여기서 오영범이 제기하는 한방 같기는 외교, 그것이 NPT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교와 군사 간의 소설 속 갈등은 오영범이 제기한 군사식 외교 방식을 외교 파트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해소된다. 이는 강석주, 즉 문선규가 소설의 말미에서 오영범을 우연히 만나고 이를 실토하는 장면으로 처리된다.

물론 예정된 화해로 종결되지만, 본 소설이 외교와 군사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 갈등이 북의 독자들에게 호소력있게 받아들여질 만큼 대중화된 현상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일과 김일성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을까? 소설 『영생』에서는 두개의 이견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하나는 김정일이 카터의 방북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IAEA를 탈퇴하는 조건에서 카터의 방북을 가을에 가거나 논의할 문제로 미루자고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이유인 즉 김일성 주석의 건강 탓이라는 게다. 이에 대해서 김주석은 김구를 만날 때 처 김정숙이 반대했었던 사례, 항일운동시기 구국군의 우사령을 만날 때 차광수가 반대했던 전례들을 들어가며, 카터를 만나는 것이 통일전선적으로 막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설득한다(백보흠 외, 141~144쪽).

또한 카터와의 회동 직후 남북정상회담 일정 조절 문제에 대해서 김일성은 직접 나서서 양보할 것을 지시한다. 회담 대표는 정상회담 일정을 최대한 늦추어 잡으려 했지만, 김일성이 직접 지시하여 회담 일정을 7월 25~27일로 당겨 잡는다는 내용이다. 실제 김일성이 회담 대표와 논쟁을 하는 형식으로 그려지지만, 현실에서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김일성이 김정일과 논쟁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백보흠 외, 305~308쪽).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견설은 충분히

가능하다. 소설 속에 그리듯이 그것이 모두 김일성의 건강을 걱정한 김정일의 배려이기만 했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봄직하다.

## 2) 숨어있는 강경론을 끄집어내는 북한식 협상관

한편 북한은 미국 내 정책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두 개의 소설들은 미국 내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갈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힐러리와 고어의 논쟁도 나오고(정기중, 225~227쪽), 애스핀 국방장관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간(360~367쪽)의 논쟁도 나온다. 대체로 이들의 논쟁은 신중론 대 강경론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역시 강경파가 주도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판단인 듯하다. 북한 문헌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미국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어떤 합의를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지연전술을 쓰며, 결국은 강경파들이 원하는 대결 정책을 들이댄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강경보수세력이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하오. 미국의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거든... 두 차례의 조미회담이 공회전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막부득이해서 협상을 묵인하다가도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뒤집어 엎소. 우리는 미국정계의 양면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연전술을 쓰고 있소. 우리는 여기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잘못하다간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잃을 수 있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소(백보흠 외, 136쪽).

김정일 장군께서 인민군 군인들에게 북미대화에 환상을 가지지 말고 헤이됨이 없이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도 옹당한 원칙적인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김철우, 315쪽).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6자회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의 입장은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회담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8월 1차 6자회담이 끝났을 때에도 북한은 회담이 ‘백해무익’하다며 결렬을 선언했고, 2차 6자회담에서도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때문에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미 비난을 강화했다.<sup>9)</sup>

이같은 협상관은 미국의 협상 팀은 재량권이 없다는 것, 그 본질에는 미국의 강경파들이 숨어있고 이들을 전면에 끄집어내어 협상을 하던가 대결을 하던가 하지 않는 한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차피 강경파를 누르지 못한다면, 그런 온건파가 주도하는 협상이라는 것은 시간 끌기(백보흠 외, 6쪽, 136쪽)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강경파를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의 예상되는 반발을 온건파가 누르고 나올 때 비로소 협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진행될수록 북한은 온건파의 입지를 키워주기보다는 강경파를 자극함으로써, 온건파가 강경파를 누를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같은 대미관은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미국과 대립 관계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다. 나름대로 약자의 피해의식을 반영한 합리적인 협상관이긴 하나, 악순환의 기제로 작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같은 북한의 협상 태도야말로 매년 대미 강경정책에 매달리게 만들고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강경정책을 더욱 초래함으로써, 자신들의 강경정책이 맞았다는 엉뚱한 확신을 갖게 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한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9) 『연합통신』, 2004년 2월 26일.

1992년의 일화를 보자.

당시 조선인민군 창건 60돐 경축 열병식을 준비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때자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열병식에서 이같은 구호를 굳이 내걸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즉석에서 구호를 그대로 두라고 하며 “혁명적 구호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구호가 화면이나 사진에 나가도 상관없다며 김정일은 북미대화에 환상을 갖지 말고 흔들릴 줄 모르는 대미 강경 입장을 만천하에 과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김철우, 312쪽).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북의 태도가 93년 초 미국이 팀 스피리트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 건 아닐까?

1994년 카터 방북시 김정일이 카터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군부대를 시찰했다거나(백보흠 외, 221쪽), 2000년 울브라이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군중카드섹션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을 연출한 것 등도 마찬가지로의 협상전술인 셈이다.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이 1999년 5월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당시에도 김정일은 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한다. 평소와는 달리 북한의 언론들은 김정일이 어느 부대를 시찰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내보냈는데, 당시 김정일이 시찰한 것으로 보도된 김책 제4보병사단은 한국 전쟁 당시 단 중장의 24사단을 격파한 ‘대전해방전투’와 ‘서울해방전투’를 수행한 부대였다. 북한의 대미 심리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김철우, 105쪽).

### 3) 김정일 리더십

김정일은 행동하는 인간을 선호한다?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지휘관, 지략, 배심, 의지력, 결단성을 지닌 지휘관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정기중, 386쪽). 김정일이 오영범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작전하는 지휘관, 탐구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인물로 규정한다. 김일성 시대의 인물들은 대체로 융통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형이고 자리지킴이나 하는 인물들이 많다고 비판된다(정기중, 406쪽). 북한식 세대교체론의 기준인 셈이다. 김정일이 선호하는 것은 책임감있게 전투에 진입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영웅의 기질을 지닌 인물이다(정기중, 389쪽).

이같은 인물이라야 “적들을 되게 다블러델 뿐 아니라 혼란에 빠뜨려 갈팡질팡하게 만들”수 있다. 외교부에서는 문선규가 이같은 인물의 전형이다. “외교부의 《정예팀》이 공격전 뿐만 아니라 전술전, 지혜전도 잘 벌리고 있다.”는 칭찬도 그래서 나온다(정기중, 443쪽).

김정일이 외교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수를 잡는 것인 듯 하다. 흔히들 바둑에서 승패는 선수를 쥐는 쪽이 승리한다고 한다. 그래서 집을 수를 손해보더라도 백들보다는 흑들을 서로 쫓려고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김정일은 곳곳에서 “주동을 쥐고 적들을 역포위할 것”을 강조한다. “주동을 쥐고 배심있게 행동하게 하시오. 배심이자 곧 승리요!!”(정기중, 129쪽).

### 4) 북한의 피포위의식(被包圍意識, siege mentality)과 미묘한 중국관

『영생』에서 김일성은 주변국들의 대북관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997년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북한이 주변국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은 지금처럼 대북 제재에 대해 가장 선도적이었다. 당시에 도 일본은 ‘즉시적인 경제 제재’를 주장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제재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 전쟁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한 핵 개발과 군사대국화에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백보흠 외, 190쪽).

한편 러시아는 어떠한가? 북핵 문제리는 기회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패권자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의도라고 분석하며 김일성은 ‘쓰거운’ 웃음을 짓는다. 턱도 없는 짓이라는 게다(백보흠 외, 191쪽).

작가는 중국을 물론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로 쓰고 있다. ‘전국 이래 중국과의 친선 단결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이 자신들의 핵문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유의한다’고 김일성은 독백한다. 그러나 소설 『영생』은 중국에 대한 편치않은 시각을 조심스럽게 드러낸다.

15일부 《도교신봉》은 우리의 탈퇴성명과 관련하여 중국지도자들의 발언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반대한다는 종래의 어조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중국외교부장 전기침이 일본외상과의 회담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마당도 포함하여 독자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유엔토의를 반대하는 종래의 립장에서 물러선 것이라고 썼다. 또한 신문은 강택민 주석이 제재를 반대한다는 자세는 바꾸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를 향해 인내성 있게 대화에 의한 해결을 호소하던 중국이 조선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중 사이에 항상 쟁기를 치지 못해 안달아하는 일본 신문들의 못된 버릇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핵문제》해결에서 대화의 방법을 주장한 중국정부의 립장만은 명백히 짚었다고 보시었다(백보흠 외, 192~193쪽).



최근 북중관계 변화론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설 『영생』에 따르면 실제 북한이 중국 변화론을 느낀 것은 연원이 오래이다. 1994년이라는 시대 배경 하에서 사회주의 배신자로 간주되는 러시아에 비할 바 아니지만, 북한은 중국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1997년이라는 시점, 소설이 발간된 시점에는 이미 이 같은 대중국관이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결국 북한은 소설 속에서마저 고립무원이다. 미국은 적대국이지만 그 외 한국, 일본, 러시아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마저도 변해가고 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외로운 항쟁이라는 사명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피포위의식에 다름 아니다.

#### 4. 死即生の 선군정치 : 근거와 이론

##### 1) 전쟁불가피론과 死即生の 평화론

두개의 소설을 관통하는 기본 전제는 미국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항시 전투 체제, 비상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력사의 대하』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결정하는 6가지 원칙을 나열하고 그 각각에 대한 판단을 통해 미국의 공격이 임박해있다는 것으로 결론짓는다(정기중, 214쪽). 김정일이 대미 항전을 결심하는 전제인 셈이다.

결국 미국과 우리와의 정면충돌은 더는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권을 수호할 역사적 사명도 함께 걸머지고 있

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판가리대결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우리 혁명은 물론 세계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말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맨앞장에 나서서 미국과 결판을 지어야 합니다(백보흠 외, 317~318쪽).

김정일은 전쟁을 결심한다. 이 전쟁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준비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대로서의 역할론이기도 하다. ‘장군님께서 드디어 전쟁을 결심하셨다’는 대목(백보흠 외, 216쪽)에 이르면 우리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진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 위기가 해소되는 마지막 대목에 등장한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 오진우는 무혈전쟁론을 읊조린다. 김정일이 결심한 전쟁은 무혈전쟁 즉 평화를 위한 전쟁 결심이었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sup>10)</sup> 미국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전쟁으로 맞받아칠 때에만 전쟁 도발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북한식 평화론인 것이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살 수 있다는 사즉생의 평화론인 셈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허무는 것이어서 남측의 독자들로서는 당혹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지만, 북한의 정세관이 상당 정도 피포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저들 정세관의 근저에 놓인 사명감과 피포위의식,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가 탄생하는 배경인 것이다.

---

10) “그런 즉 바로 이것이 그이께서 결심한 전쟁이였는가?!…… 그것은 비록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전쟁이었지만, 준엄하고도 치열한 격전이었다.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이 판가름된 엄혹한 전쟁이었다”(정기종, 485쪽).

## 2) 1994년 10월 제네바 협정의 타결과 선군정치의 시작이라는 역설

북한이 선군정치를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1995년 1월 1일로 정식화되어 있다. 그것은 김정일이 1월 1일 다박술 초소를 방문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군정치의 시작 시점은 1994년 10월경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장군께서는 1994년 10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군증시정치철학을 천명하시고 이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펼쳐심으로써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할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신다(김철우, 264쪽).

이 시점은 사실상 제네바협정이 타결된 바로 그 즈음이다.<sup>11)</sup> 왜 북한은 제네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전쟁 위기가 평온으로 돌아간 바로 그 시점에 선군정치를 시작한 것일까?

정세의 완화에 따라 군사를 완화시키는 것은 적에게 침략과 전쟁의 결정적 순간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다. 세계전쟁사는 1941년 12월의 진주만 공격을 앞두고 일제가 여느 때없이 미국을 상대하여 평화공세를 벌리고 1942년 6월 쏘련방 침공을 앞둔 히틀러가 레의 이상의 화친을 호소한 사실이든가 력대의 전쟁개시일, 전쟁개시시간이 가장 긴장이 풀리고 해이된 순간을 노려 선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정세를 격화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상관없이 시종일관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는 관점에서 군사를 중시해 나갈 때 사회주의 위업 수행이 아무런 장애없이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다(김철우, 92~93쪽).

---

11) 제네바 협정은 1994년 10월 21일 체결되었다.

체네바 협정이 체결되는 바로 그 날 그 순간에도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sup>12)</sup> 바로 그 점에서 정상적인 국가체제로 돌아가기보다는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를 선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김정일이 결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은 홀로 고고히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다는 일종의 위기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920년대 구소련이 그랬듯이 단신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에 맞선다는 대결구도를 상정하고 있는 한(김철우, 40쪽),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정일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공석이 된 주석 자리를 물려받기보다는 현재의 비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향후 계속될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간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군명도의 탄생 배경인 것이다. 이 점에서 선군은 군사 우위의 장기 항전 체제 즉 전쟁을 각오하고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는 사극생의 정치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라 하겠다.

### 3) 피포위의식과 선도의식이 결합된 항구적인 비상체제 : 先軍의 조직, 대중, 이데올로기

요컨대 선군체제는 피포위의식과 선도의식이 결합된 항구적인 비상체제이다. 그 조직적, 대중운동론적,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보도록 하자. 먼저 선군정치가 표명하는 조직 형식을 보자.

‘조직’의 측면에서는 국방위원회 중심체제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

12) 이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불튼은 미국의 가장 큰 역할은 북한의 속입수를 밝혀내고 고립시키는 데 있다고 발언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음을 제차 드러내고 있다. 『연합통신』, 2004년 3월 31일.

다. 과거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다음 순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주권 기관, 사법검찰기관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김철우, 24쪽). 95년부터 사실상 국방위원회가 이같은 지위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98년 헌법 개정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정일은 당 비서로서 당을 주도하고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주도하며 나아가 국방 위원장으로서 국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김철우, 34쪽). 국방위원장이 국가와 행정을 주도하게 한 점에 선군정치의 조직적 특징이 있다.

물론 이같은 체제는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선군정치는 처음에는 비상시국을 이끌어가는 통치 ‘스타일’ 즉 리더십 형태로 등장했지만,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시스템’ 즉 제도화된 체제로 등장한 것이다.<sup>13)</sup>

한편 ‘대중운동론’의 측면에서 보면 선군정치는 군사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시킨 점에 특징이 있다. 선군정치론에서는 군대와 민중을 혁명의 2대 역량으로 제시하고 군사를 혁명의 제 1기둥이자 주력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철우, 27쪽). 과거 노동자, 농민, 병사 등으로 구분하던 혁명 역량 구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군대를 하나의 독자적인 혁명 단위로 보고 다른 단위는 민중 즉 근로인민대중으로 단일화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같은 분류는 사실 1994년 11월 1일에 발표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김정일의 논설에서 언급되고 있다.

13) 이를테면 김일성 사망 후 100일이 지난 10월경, 후임 주석을 선출할 것인가 등의 국가기구체제 정비 문제를 두고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이 내린 결론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의 자리에서 현 체제를 비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선군정치의 출발은 처음에는 리더십 형태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이같은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98년 이후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추론이다.

원래 인민대중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데서 사회계급적 처지를 보아야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 사람의 사상과 행동은 사회계급적 처지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혁명적 영향을 받고 선진사상을 체득하면 사회계급적 처지는 어떠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어떤 사회 계급적 토대를 가졌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 기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와 인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민, 애족 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sup>14)</sup>

이 논설에서는 인민대중이라는 단일 범주를 등장시키고 인민대중을 가르는 기본 척도를 사회계급적 토대가 아니라 사상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여 노동자, 농민과 같은 고전적 계급 분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물론 김정일은 직접적으로 군사를 혁명 역량으로 이론화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 북한은 혁명의 주체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과 다른 한편으로 군사를 소홀히 하고 인민군대를 방기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가 인민대중이라는 범주를 통해 북한식 주체 개념으로 정립되었다면, 후자가 바로 군대를 혁명 주력화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이 시점부터 김정일은 인민대중과 군사라는 2대 역량을 혁명의 주력으로 상정하고 있는 셈이었다.

끝으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물론 항일빨치산 전통과 유훈 체제

---

1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 11. 1),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73쪽.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에서 창출한 선군혁명 노선이 김정일 대에 와서 선군정치노선으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이 김철우의 설명이다(김철우, 22쪽).

#### 4) 先黨後軍의 先勞정치에서 先軍後黨의 先軍정치로

선군체제의 특징은 한편으로 군의 지위에서의 차이로 드러난다. 과거 출판물들에서 ‘당, 인민, 군’의 순서로 쓰던 것을 ‘당, 군, 인민’의 순서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1997년 2월 김정일은 총대철학을 제기하며 군대의 지위를 높이자며 이같이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김철우, 278쪽).

군대의 지위는 더 나아가 선당후군이 아니라 선군후당으로 격상되기 까지 한다.<sup>15)</sup>

즉 선행 사회주의 국가들의 건설 경로를 보면 모두 노동계급이 단련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군대와 군사가 탄생했지만,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그랬듯이 항일혁명군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당이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선군정치는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것이고 선행 사회주의의 경험들을 한 단계 높여내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군이 인민보다 앞서고 군이 당보다도 먼저 건설되는 시스템이라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존의 총통제나 남미식의 훈타(junta) 즉 군사체제와 다를바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김철우의 대답은 명확하다. “에집트 대통령이 내왔던 군사총통제나 70년대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존재했던 군정과는 구

15) 물론 이는 건설 경로에서의 선후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위에서의 선후는 아니다.

별되는 군중시의 국가 정치 체제이다. 국가 기구 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라는 것이다(김철우, 24쪽).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선군정치가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적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느낌이다. 과연 북한의 선군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인가?

## 5. 2차 6자회담 이후

앞서 보았듯이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냉전의 비대칭적(asymmetric) 해소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에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반대급부로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94년과 비교할 때, 북한의 이러한 요구가 반테러 전쟁에 여념이 없는 부시 공화당 정권에게 수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쁜 행위에 보상 없다’는 부시 행정부의 철학은 거의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대북 봉쇄를 가상하는 훈련을 전개하여,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따라 사실상의 대북 제재에

---

16)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격적 방치(hawkish neglect)’ 또는 비포용정책을 구사하였다. 구갑우,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 평화과정 : 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2002), 22쪽.



<표 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대화와 압박의 동시병행
3대정책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li> <li>• UN안보리 제재 논의</li> <l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대북합동해상저지훈련</li> </ul>
대화의 전체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Regime Transformation)

돌입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대북 압박은 북한이 근본적인 개혁(regime transformation), 즉 체제전환 수준의 개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어서,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 요구인가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7)</sup>

2차 6자회담에서도 이같은 차이는 확인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큰 차이를 확인한 회담(Talks end with gulf)<sup>18)</sup>라고 총평한데서 나타나듯이 양자간의 차이는 여전히 막대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고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이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다. 『역사의 대화』에서 문선규는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을 심판석에 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정기종, 62쪽). 또한 김정일은 핵 논쟁을 법률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정치군사화해야 한다며 “지금 기구는 한갓 미국의 사환군에 불과하므로 이것들은 쫓겨버리고 미국과 직접 맞붙어야 합니다. 미국을 끌

17)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제 ‘맞춤형 봉쇄’라기보다는 ‘끝없는 압박(persistent pressure)’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2003년 1월 16일.

18) 『워싱턴 포스트』, 2004년 3월 29일.

어내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다(정기중, 129쪽).

이처럼 미국과 직접 맞부딪치고 미국의 시간끌기에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에 발간된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신년 공동사설을 해설하는 「3대전선 총공세 앞으로」라는 노동신문 정론<sup>19)</sup>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선 핵포기’ 선언을 고집하는 것을 북한 붕괴를 위한 ‘끝까지 쥐어짜기’ 전술로 간주하며 올해 미국과의 “판가리 결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선신보 공동사설 해설 기사 역시 미국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데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0)</sup>

북한은 미국이 다자회담을 강조하는 것을 회피 전술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6자회담 내에서 진행된 북미대화에서도 켈리는 김계관에게 이 대화는 비공식적인 대화(talks)이고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언급하였다고 전해진다.

북한과 미국이 6자라는 틀을 사이에 두고 이처럼 끝없는 대립을 계속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북한은 어떤 승부수를 둘 것인가?

현재 3차 6자회담이 6월 전에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대통령선거라는 일정에 쫓기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논란은 조금씩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3개의 이야기대로라면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강제로라도 끄집어낼 듯하다. 3차 6자회담은 물론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3차 6자회담이라는 마지막 협상의 장이 있고, 그 때까지 북한은 모든 것을 의무성에 맡겨둘 것이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외무성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결정 사항이

---

19) 『노동신문』, 2004년 1월 3일.

20) 『조선신보』, 2004년 1월 2일.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을 주도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이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외무성의 조치를 지지한 이상, 이 문제에 관한한 외무성에 전권을 준다는 북한식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sup>21)</sup>

문제는 3차 6자회담 이후이다. 3차 6자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이 명백하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따라서 승부수를 띄울 것 같다. 어차피 대통령 선거 후에 부시에게 당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면서, 과연 북한은 어떤 승부수를 띄울까?

아니면 다행스럽게 중국이나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먹혀들어 3차 6자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운명이 걸린 2004년, 한반도호는 과연 어디로 갈까? 2004년판 카터가 있을까?

## 참고문헌

### <1차 자료>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김정일 선집』, 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73쪽.  
『로동신문』, 2004년 1월 3일.

### <2차 자료>

구갑우, “비관적 국제이론과 한반도 평화과정: 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2002), 22쪽.  
미래전략연구원, 『2003년 북한문제 시나리오와 대책』(2002), 267쪽.  
장달중·이정철, “냉전과 탈냉전의 남북관계”, 『국제문제연구』, 24호(2002), 72~73쪽.

---

21) 이 점에서 3월 25일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의 11기 2차회의에서 다른 결정사항이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징조라고 하겠다. 지난 1차회의에서 외무성에 준 지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2003년 1월 16일.  
『연합뉴스』, 2004년 1월 16일.  
『연합뉴스』, 2004년 3월 3일.  
『연합통신』, 2004년 2월 26일.  
『연합통신』, 2004년 3월 31일.  
『YTN』, 2002년 11월 14일.  
『워싱턴 포스트』, 2004년 3월 29일.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1월 10일(돈 오버도퍼의 기고문).  
『조선신보』, 2004년 1월 2일.

Abstract

## Kim Jong-il's "Military-First Regime" and the Truth Game in North Korea's Nuclear Crisis

Jung Chul Lee(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sed on the review of two novels and a social scientific analysis,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insights on 1)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f 1994 and 2)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im Jong Il's "Military-First-Regime."

By reading between the lines, the two novels reveal that the North Korean perception of the nuclear issue is such that nuclear weapons are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that the nuclear crises are the outcome of the threat provoked by the United States. These two novels deal with several interesting stories e.g. the conflict among bureaucrats within the military and diplomatic core in 1993, the concrete dialogues between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and Kim Il-Sung in Pyongyang in 1994 and the truth about the confession over the HEU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in 2002. Both novels, of course, reach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game could be won not by peaceful gestures but rather by war-like preemptive action.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North declared a quasi war state and

withdrew from the NPT in 1993 and IAEA in 1994.

The social scientific analysis contains theoretical analyses on the nature of the “Military-First-Regime” and its origin. Ironic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Regime” began in October 1994 when the Geneva Agreed Framework was sign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s for this.

The three books show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 and the security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siege mentality,” following the asymmetric dissolution of a cold war in the North East Asian region. As such,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ilts toward confrontation with “imperialism,” the solution of which can be found in first admitting that North Korea’s isolation is not totally self-imposed.

**Key Words :** North Korea’s nuclear crisis, Military-first regime, Geneva agreed framework, siege mentality,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